



토지조사사업



- 기본정보
- 정의
- 내용

바로가기

- 관련항목

내 검색어

토지조사사업 (土地調查事業)

근대사

제도

1910년부터 1918년까지 일제가 우리 나라에서 식민지적 토지제도를 확립할 목적으로 실시한 대규모의 조사사업.

+ | - | ☰ | URL | 의견제시



관련항목

기업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는 조직적인 경제단위.

농민운동 농민이 농민의 권익을 위하여 조직적으로 전개하는 사회경제...

사회운동 계층간의 이해관계 대립을 비롯한 사회의 구조적 성격에서 기...

조선 고려·조선시대에 세곡 운반인 조운(漕運)에 사용된 선박.

조세 국가·공공단체가 재정권(財政權)에 의하여 일반국민으로부터 개별...

공동체 특정한 사회적 공간에서 공동의 가치와 유사한 정체성을 가진 사...

동양척식주식회사 1908년 서울에 설립되었던 국책회사(國策會社).

마듬 마름과에 속하는 일년생 초본식물.

지주 밭해시대의 지방행정구역.

분야 근대사

유형 제도

시대 근대

성격 조사사업

시행시기 1910년

폐지시기 1918년

▲ 정의

1910년부터 1918년까지 일제가 우리 나라에서 식민지적 토지제도를 확립할 목적으로 실시한 대규모의 조사사업.

▲ 내용

일제 하의 토지조사사업은 일제가 1910년 우리 나라를 완전히 식민지로 강점한 전후 식민지체제 수립을 위한 제1차적 작업으로 실시한 종합적 식민지 정책의 하나였다. 일제가 특히 토지조사사업을 서둘러 실시한 목적은 다음과 같다.

토지조사사업



• 기본정보

• 정의

• 내용

바로가기

• 관련항목

내 검색어

넷째, 일제는 역토·둔토·궁장토 등에 농민들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투탁지(投托地)와 관청이 서류상으로 잘못 처리해 위의 토지들에 섞여 들어간 혼탈입지(混奪入地) 등을 국유지에 강제 편입시켜버렸다.

투탁지와 혼탈입지는 비록 외형상으로는 역둔토나 궁장토였으나 내용상으로는 명백하게 민유지였다. 물론 조선정부나 특정의 관청 또는 궁방은 투탁지와 혼탈입지를 민유지로 간주하여 소작료를 징수한 것이 아니라 지세만을 징수하였다.

일제는 이러한 농민들의 민유지인 투탁지와 혼탈입지를 그들의 국유지에 강제 편입시켜버렸다. 이 또한 일제가 농민들의 사유지를 무력에 의거해 빼앗은 것이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1910년 9월까지 일제가 강제 창출한 국유 농경지는 12만 8800여 정보에 달하였다. 이 중에서 국유지로 될 수 있는 제1종 유도역둔토가 약 3만 2100정보였다. 민유지를 무력으로 빼앗아 국유지에 강제 편입시킨 면적은 약 9만 6700정보에 달하였다.

일제가 강제 창출한 국유 농경지면적은 국유지에 대한 토지조사가 완전히 끝난 1919년 2월에는 더욱 증가해 13만 7224. 6정보에 달하였다. 또 국유 농경지의 소작농은 무려 30만 7800여 호에 달하였다. 이것은 총농가호수의 약 10.7%, 순소작농호수의 약 28.7%에 해당하는 방대한 것이었다. 조선총독부는 강제 창출을 통해 국내 최대지주가 되었고 동시에 가장 조직적으로, 무력적으로 소작농을 착취하는 지주가 된 것이다.

이상의 농경지 이외에도 일제는 방대한 면적의 미간지를 무상으로 점유하였다. 1910년 토지조사 직전의 미간지 면적은 약 120만 397정보였다. 이 중에서 무주한광 미간지(無主閒曠未墾地)가 약 59만 5400정보였고, 민유 미간지(民有未墾地)가 약 60만 5000정보였다.

▲ 집필자

집필 (1996년) 신용하